

“수출 줄고, 나랏빛은 눈덩이”… 신용등급 하향 경고 커진다

IMF 1%, JP모건 0.5% 성장률 하향 GDP 성장률, 4분기째 0.1% 밀돌아 국가부채 6222조, GDP 대비 2.5배 관세 충격·정치 불안에 외자 이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 등이 영향을 받으면서 세입이 줄어들 수 있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상호 관세 시행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대로 추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국가신용등급에 대해 한국이 여전히 여력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부채에 따라 그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겠다”고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 경제 분석기관들까지 “성장률을 낮추고,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제 발행 금리가 오르고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는다. 외국 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여



1분기 한국경제가 3분기 만에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소수점 둘째 자리로는 -0.24%다. IT 경기 부진으로 -0.5% 성장률을 기록했던 2022년 4분기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24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트레일러가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가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을 만큼 복원도 쉽지 않다.

◆하락 압박 받는 신용등급… 구조적 취약성과 대외 리스크 ‘이중고’

한국경제 주변 곳곳이 잿빛 그림자다. 한국의 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4분기 연속으로 0.1% 밑으로 떨어진 ‘저성장 쇼크’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이후 분기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0.1%→0.1%→-0.2%’로 떨어졌다.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것이다.

글로벌 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의 미

래를 잿빛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했다. 지난 1월 전망치(2%)에서 한꺼번에 절반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더 큰 타격을 받는 점이 반영됐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4일 올해 한국 경제가 0.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내려 잡았다. 기존 전망치는 0.7%였는데 더 낮은 것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에는 외부의 역풍이 눈에 띄게 커질 것”이라며 “기저효과 때문에 민간 소비는 반등하겠지만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달러당 원화도 1400원대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로, 파운드, 위안 등 보다 푸대접이다.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국내 외의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달러 자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과 원자재·부품 해외 의존이 늘어난 지금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 ‘나쁜 원저’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나랏빛도 눈덩이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는 6222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2.5배나 되는 규모다. 추가경정예산을 생각하면 나랏빛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약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다면 추가로 240조원(국고채 발행)까지 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와 금융시장이 흔들리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부담은 신용강등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과 빚 상환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또다시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나라와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보게 된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타났던 환율 1500원 시대가 조만간 닥칠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등급 자체 보다 무서운 ‘하향 파급효과’
만약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파급 효과는 단기간 내 한국 경제에 영향을 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정부와 공기업의 외화 조달이다. 등급이 떨어지면 국제 이자율이 상승하고, 공기업의 차입 비용 역시 급등하게 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등급과 직접 연동돼 있어, 국가등급 하락 시 조달비용의 연쇄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도 흔들린다. 외국계 자금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국내 시중금리에 전이되며, 실물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부 외국계 펀드와 투자기관은 특정 신용등급 이상 국가에만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어, 등급 하향시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또는 비중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환율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향이 확정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자산 매도세가 촉발되고, 이는 환율 불안을 키우며 외환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김학균 신용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용등급은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문제는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경제·통상 대응력 붕괴… 비상 상황 속 ‘컨트롤타워’ 실종

한국 성장률 전망 1.0%로 ‘반토막’ ‘조기 대선’에 손 못 대는 통상협상 컨트롤타워 잇단 교체, 공백 장기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반토막으로 내려 앉았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와 철강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만큼 경쟁국 대비 타격이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대미 통상협회가 진행 중이나,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6월 초까지 통상협상의제 선정조차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2일 발

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는 IMF의 1월 전망(1.0%)과 비교해 절반으로 낮아진 수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만에최대 하락폭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3.3%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한국의 낙폭이 더 두드러진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를 담지 않았으나 수출 의존도가 크고,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의 경제 구조를 반영해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서 대미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로관세가 사실상 무력화된 셈이다. 수출 부진은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와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국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베트남, 유럽, 일본 등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글로벌 공급망도 혼란 속으로 빠져든 모습이다. 이로 인해 배터리와 석유화학 제품 등 연관 산업도 직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의 ‘2+2 대미 통상협’을 통해 오는 7월 8일 협상 시한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협력 3개 분야 6개 작업반을 구성해 관세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5월 중순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장관급 협의를 통해 작업반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환율 부문은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 채널로 논의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따라 대선 전까지 현 정부가 통상협상 의제 설정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지난 28일 방미 결과 백리빙에서 “미국 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6월 3일 대선이 있고 이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라이 패키지에 잘 담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도 USTR과 깊이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기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제·통상 컨트롤타워의 손바뀜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하면, 한 달 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대대행 체제로 다시 바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민생은 절벽인데, 여의도엔 ‘경제’가 없다

자영업자 매출 급감, 폐업 속출
여야 공약, 지역적 이슈에 집중
경제 체질 개선 논의는 실종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던 A씨(35)는 최근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3년 전 가게를 열었을 때보다, 현재 매출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코로나19때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가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A씨가 폐업하는 이유다. 이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단골 가게’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보인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여의도는 이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이 한창일 때도 주요 후보들은 각종 경제 공약을 내놓았지만 인공지능(AI) 투자나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지역적인 이슈만 다뤘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큰 의제는 내놓지 못하는 실정인 셈이다.

그나마 경선이 끝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경제에서만큼은 실용노선을 견졌다는 의지를 밝혀 민주당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내세운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AI 기본사회 등을 언급했다. 다만 ‘성장·실용’ 의제가 아직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숙성되지는 않은 모양새다.

반면 경선을 한창 진행 중인 국민의

힘은 경제 공약보다는 ‘반명(반이재명) 박테트’ 전략만 눈에 띈다. 다만 ‘컷오프식’으로 경선이 진행 중이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생활밀착형 공약만 연이어 던졌다. 한달 6만원에 전국 대중교통을 통합 이용하게 하거나, 스토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거품 없애기,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과제’, 노동 시간 유연화나 주 4.5일제 도입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생활밀착형 공약인만큼 경제 성장을 위한 ‘대형 의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그나마 ‘경제’ 이야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논의할 때만 나온다. 국회는 지난 23일부터 상

임위원회별로 12조 2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대선이 진행 중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정치권이 입을 모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논의가 더디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어렵으니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다소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